대정부질문 마지막 날…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날선 공방

한 총리 "천일염 사재기는 방류 위험성 아닌 기후 등이 영향"

국정원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실태·고려사항 문건' 격돌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를 비판했고,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일본이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값싸고 쉬운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것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불법적인 해양투기를 제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만든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내용을 읽은 후 한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총리와 국무위원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을 48시간 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이 관련자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국회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실상 답변을 미뤘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복지·보훈 정책을 강조하며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문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정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으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된다"며 "실제로는 여러 법적 판단이라든가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조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여야 협치의 결실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단 지금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보훈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사안들도 계속적으로 협조·협의하며 그런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 文정부 겨냥 "태양광 비리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감사원 감사 별도 공직 감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날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도 감사원 발표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조국, 서울대 교수 파면은 인과응보"

"총선 출마하면 민심 심판뿐"

국민의힘은 14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인과응보'라며 내년 총선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말로 또다시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며 "최소한 '명예'를 운운하려면, 3년 6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으면서 받아 간 월급이라도 토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해 가혹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조 전 장관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민주당 눈에는 그 표창장 하나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땀이, '조국'이라는 권력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눈물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으로 향하겠다는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노한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특권과 반칙으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과응보"라며 "교수직 파면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SNS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적은 데 대해선 "지금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日요미우리 '관동대학살' 보도에…국힘 "한일관계 정상화 나비효과"

"윤 대통령도 보도에 주목"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100년 전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8사실을 1면 기사로 다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일본 내 의미 있는 변화가 재일교포들의 위상과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기획기사로 다룬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기사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은 관동대학살이 유언비어이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이라고 했다"라며 "보수 주류인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은 중요한 변화로서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가져온 나비효과"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관동대지진 100년 교훈'이라는 제목의 5번째 시리즈 기사를 게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사에서 "1923년 9월 1일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재일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의 2008년 보고서를 인용해 "지진 피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약 10만명이며, 이 중 1%에서 수%가 이 같은(자경단 폭행) 사안인 것으로 추계했다"고 실었다. /연합뉴스